

민주, 내년 3월 재산세·건보료 경감 대책 발표

양도세 증가 유예 워킹그룹 만들 것 내년 보유세 산정 공시가 적용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당정 협의를 거쳐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및 건강보험료 경감 대책을 마련, 내년 3월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일례로 재산세의 경우 2022년 보유세 산정 시 2021년 공시가격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월요일 당정 협의에서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납세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다주택자 양도세 증가 유예(논의)와 관련해 당내 워킹그룹을 만들기로 했다"며 "기재위원장(윤호덕 의원)이 팀장, 정책위 수석 부위원장(송기현 의원)이 간사를 맡아 다양한 의견을 가진 의원들과 함께 현장감을 살리며 심도 있는 검토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내년 3월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현행 150%인 세 부담

상한을 조정하는 것, 내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것,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 다양한 대안별 부담 경감 수준과 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해 보완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앞선 당정 간 논의에서 거론된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폭넓게 검토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0일 당정 협의에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상한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재산세의 경우 직전 연도 세액의 105~130%, 재산세·종부세 합산 세액의 경우 직전 연도의 150%(1주택자 기준)를 넘지 않도록 상한을 두고 있다. 이 상한선을 낮추면 공시가격이 오르더라도 세 부담이 지나치게 급격히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상한을 100%로 제한할 경우 아예 보유세를 동결할 수도 있다. 내년 주택 보유세 산정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들여다보기로 했다.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는 공시가격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에, 내년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면 보유세를 사실상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효과가 있다.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한시 납부 유예 조치도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됐다. 당장 소득이 없는 1주택 은퇴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인 “선대위 구성원 주어진 역할 넘지 말라”

국힘, 총괄본부 중심 운영 지침

국민의힘 선거대책위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선대위 난맥상을 지적하며 고강도 경고를 쏟아내고 있다. 선대위 쇄신 방향을 '인적 개편' 대신 '효율적 협업'으로 잡은 만큼 자신의 그림을 강화함으로써 선대위의 불협화음을 최소화하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23일 선대위 회의에서 "총괄상황실 중심으로 전체 의견을 제대로 수렴해 후보와 직접 협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도록 하라"고 말했다. 공개석상에서 임태희 본부장이 이끄는 총괄상황본부 중심으로 선대위를 운영하라고 내부 지침을 내린 것이다.

총괄상황본부는 종합상황실(이철규 실장), 전략기획실(김태섭 실장), 정무대응실(정태근 실장), 정세분석실(김근식 실장) 등 '4실 체제'로, 김 위원장의 별대 성격이 짙다.

선대위 효율화를 위해 새롭게 시행된 일일점검회의는 임태희 본부장과 윤 후보의 핵심 측근인 권성동 사무총장(종합상황지원본부장)이 공동주재한다. 이를 두고 총괄상황본부의 주도권을 강화하면서도 윤 후보 측 주요 인사들을 배제하지 않는 쪽으로 김 위원장과 윤 후보가 절충점을 찾은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김 위원장은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 6본부 체제' 해체를 공개 촉구한 데 대해선 "지금 시점에서 총괄본부장들의 사표를 받아 새롭게 선대위를 구성

하는 그 자체가 별로 실효를 거둘 조치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대신 주어진 역할 범위를 넘어서지 말라고 선대위 구성원들에게 경고장을 날렸다. 이른바 '윤핵관' (윤석열 후보 측 핵심 관계자들) 논란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경선 과정에서 후보와 가까웠다는 사람들이 오버하는 측면에서 불협화음이 생기고 있는데 앞으로는 시정될 것"이라며 "자기네들이 잘못된 이야기를 해서 윤 후보 당선에 도움이 될지 깊이 생각한다면 선거 끝날 때까지 아무 불협화음을 안 일으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연합뉴스

송영길 “이재명, 제보 들으러 급히 가다가 음주운전한 것”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3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과거 음주운전 이력과 관련, "음주운전은 물론 잘못했으나 음주운전도 제보자 이야기를 들으러 급히 가다가 그랬다고 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전환선대위 작능본부 출범식에서 이 후보의 전과 기록 4건의 배경을 언급한 뒤 "전과 내용을 보더라도 다 공익적 활동을 뛰다가 그렇게 된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시민과 함께 성남의료원을 건설하기 위해 20만명의 서명을 받아 조례제정을 청구했으나 한 나라당 의원들이 주도하는 성남시의회가 이를 47초 만에 가각시켰다"면서 "울부짖는 시민과 함께 소란을 피웠다고 특수 공무집행방해로 전과를 얻은 것이 국민의힘이 비난하는 전과 4개 중 하나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문대통령, 백령도 장병 격려...천안함 용사 위령탑 참배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23일 서해 백령도를 방문 해 최치환 해병대 장병들을 노고로 위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백령도에서 '천안함 46용사 위령탑'을 참배하고 희생 장병들을 추모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백령도를 많이 방문해 천안함 용사들의 뜻을 오래 기리면 좋겠다"고 언급한 뒤 수색 과정에서 순직한 고(故) 한주호 준위도 추모하고 있는 지 못했다.

이에 김태성 해병대 사령관은 "서해수호의 날에 천안함 용사들과 함께 추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병대 여단본부 지휘통제실에서 부대 현

황을 정취한 뒤 전방관측소(OP)에 올라 장병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백령도는 군사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장병들이 긴장된 가운데 근무하고 외출·외박을 하더라도 섬을 벗어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특별한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OP 근무 장병들을 비롯해 해병대 여단본부 및 육군, 항공대 전 장병들에게 넥워머, 보습크림, 핸드크림, 립케어 등으로 구성된 겨울용품 세트를 선물했다. 또 해병대 여단 식당에서 지휘관들과 식사를 함께하며 대화를 나눴다.

/연합뉴스

'내란선동' 이석기, 오늘 성탄절 가석방

내란선동죄로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년 9월 만기출소를 앞두고 성탄절 가석방으로 풀려나게 됐다.

2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전 의원은 24일 오전 10시 시행되는 성탄절 기념일 가석방으로 풀려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 20일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이같이 심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의원은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혁명조직(RO)의

총책을 맡아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로 2013년 9월 구속기소돼 내란선동죄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2015년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확정받았다. 이 전 의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한 결과 법원행정처가 자신의 재판 기일 지정 문제를 여론 환기 목적으로 활용한 정황이 드러나자 2019년 6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전 의원의 청구는 서울고법과 대법원에서 연달아 기각됐다.

/연합뉴스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전원주택 강력추천!

전남 담양군 가사문학면

경상리 전원주택부지

■ 면적 : 456평

■ 4채 건축허가 득

■ 진입로 상수도 확보

상담 010-3675-7592